

호남, 민주 최고위 보궐선거 또 변방으로 밀려나

전현희 등 3명 공식 다음달 선거...지선 공천권 등 권력 막강
다선 의원들, 광역단체장에만 관심...별다른 후보군 없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다음 달 중순 치러질 전망이다. 광주·전남에서는 별다른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 지도부 선출은 최근 최고위원 3명의 사퇴에 따른 보궐로 치러지며, 임기도 내년 8월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도부 입성을 노릴 수 있는 재선 이상 다선 의원 대다수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은 이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변방으로 내몰리게 됐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러진다.

선출 방식 등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1일께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내년 8월까지로 제한적이지만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당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이후 8월 정당대회를 준비하는 지도부로서 권한도 막강하기 때문에 당내 권력 이동을 위한 물밑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가 이른바 '명정'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이라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의 핵심이며 진명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내년 당권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현재,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후보군도 진명 주자들이 많다는 점에서도 정 대표 진영과 친명 주자간 치열한 경쟁도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 당시 영입한 친명계 인사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친명계 원내외 모임인 혁신회의의 공동 상임대표인 그는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됐다. 또 원내에서는 친명계 인사인 강득구·이건태 의원의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 대표 측에서는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 이성운 의원 등이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남에서는 별다른 후보군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에 나설 수 있는 다선 의원의 수가 부족하고 이마저도 내년 지방선거에 몰두하고 있는 탓이다.

이와 관련 국내 최고령 국회의원인 '정치 9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해남·완도·진도·5선) 국회의원이 최근 광주·전남 일부 국회의원의 '광역단체장 욕심'에 일침을 가하면서 "광주·전남 재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하나 같이 광역단체장에만 욕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선 의원이 자기 정치에 몰두하면서 최고위원도 배출하지 못하는 등 호남 정치는 더욱 힘을 잃고 있다"며 "지방선거에 빠져 호남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과거 절대적 다수의 당원을 보유한 광주·전남은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21·22대 국회에서는 후보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는 호남 정치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9일 권리당원 선거인단 기준 확정 등을 위한 당무위원회를 연다. 경선 진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혁신당 “내란재판부 추진 숙고들”

조국혁신당 서양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장동혁 리더십 ‘빨간불’

12·3 비상계엄 사과 없는 우클릭 행보 당내 거센 반발

취임 100일을 갓 넘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장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당내 거센 반발을 불러오며 파열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 체제를 흔든 결정적 계기는 지난 3일 그가 내놓은 '12·3 비상계엄 1주년 메시지'였다.

장 대표는 계엄 선포에 대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당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며 '윤 네버(Never)'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윤계 핵심인 3선 윤한홍 의원 역시 자신들의 하물을 덮은 채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러한 당내 내용의 배경에는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 상실과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위기감이 짙게 깔려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60% 안팎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중반

박스권에 갇혀 반동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선 1년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여당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장 대표의 강성 노선이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아닌 '야당 심판론'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중진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모양새다.

당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장 대표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그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을 직접 돌며 중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수 의원은 내년 2월 설 명절 전까지 당의 메시지와 노선을 전면 수정해야 지방선거에서 승산을 기대할 수 있다며 사실상의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이번 주 예정된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오찬과 만찬 등을 통해 당내 스킨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 43명 회의…사법개혁 법안 집단 우려 표명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집단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판 지연을 초래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대법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장장 6시간에 걸친 마라톤토론 끝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지난 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와

국민의 저항으로 조기에 해소돼 헌정질서가 회복된 점에는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참석자들은 신설 법안들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떨어뜨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제도 변경보다는 현 사법 시스템을 믿고 기다려달라는 뜻을 전했다. 법원장들은 각급 법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여야, 입법 전쟁 전환

민주, 쟁점법 연내 처리 공식화...국힘, 강경 대응 예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자마자 다시금 입법 전쟁 태세로 전환하며 여의도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국회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0일 이후까

지 분회의를 잇달아 열어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의 최우선 타겟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할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이다.

국회법을 개정해 분회의장 재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토론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당 제도가 의사 진행 방해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107석의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입을 막는 폭격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법 외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대법관 중원 등 사법개혁 법안 드라이브도 걸고 있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놓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역시 같은 날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소속 의원들을 60명씩 조로 편성해 필리버스터 맞불을 놓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사기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IGFA 보험GA협회